

망중립성 원칙에 '특수서비스' 예외 도입...5G 활로 열렸다

정부가 내년부터 통신망 중립성 원칙 예외 규정에 '특수서비스' 개념을 추가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서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5G 시대에 맞는 신규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 활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ISP), 콘텐츠사업자(CP)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을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 서비스로 간주해 통신사가 접속 속도나 이용료에서 콘텐츠 기업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사업자는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

내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일정 요건에서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가능”

과기부 “원칙 명확화하고 글로벌 추세 부합”

으나, 융합서비스의 확산 과정에서 현행 법령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업자는 인터넷과 다른 기술 등을 통해 예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예외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 예외 서비스를 허용하면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부는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 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해외와 같이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특수서비스는 ①특정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②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 용도로 제공되, ③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망 중립성 원칙을 기계적으로 유지할 경우 5G 혁신 서비스 개발이 지체될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 그렇다고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할 경우 콘텐츠 기업이 통신사로부터 과도한 망 비용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특수서비스' 개념이라는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과기부는 이번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으로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

한 요건 하에서 가능해져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특수서비스 제공 조건도 구체화했다. 통신사업자가 ①인터넷 접속서비스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②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하고, ③특수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특수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망 이용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 현황과 품질 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와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가령 통신사의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하며, 관련 자료제출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서비스 제공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통신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종합 평가했다.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EU는 지난해 망 중립성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일정 요건 하에

특수서비스 제공을 허용했다. 미국은 2017년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했으나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2015년 규정된 망 중립성 원칙을 재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철 과기부 통신정책정책과장은 "망 중립성 원칙의 불확실성 때문에 5G 신규 융합서비스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문제를 이번 개정으로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미희기자



e편한세상 '드림하우스' 구경하세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조성된 대림산업 'e편한세상'의 주거 철학과 기술력을 선보이는 전 시공간인 '드림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24일 대형 규모로 연출한 주거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드림하우스는 내년 3월 7일까지 운영되며, 이후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소상공인 70% “올해 매출 평균 37.4% 줄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고정비는 임대료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평균 40% 가까이 줄었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 1018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올해 사업환경 변화를 묻는 질문에 사업환경이 전년보다 악화했거나 악화가 예상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3.7%에 달했다.

또 이러한 사업환경 악화의 여파로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줄어 들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70.8%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 비율은 평균 37.4%에 달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고정비는 임대료가 68.8%로 가장 높고, 이어 인건비(54.1%), 각종 세금(50.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원사업에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을 받은 경우가 43.8%, 받지 못한 경우가 10.2%로 각각 나타났다. 지원받은 금액은 주로 임대료(47.3%), 인건비 지급(19.1%), 개인생활자금(13.5%)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지원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소상공인 비율도 44.1%에 달했다.

지원 수준과 관련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전체 53.5%로 가장 많았다. 또 이들 가운데 45.9%가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답변한 이유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 지원'이라는 점을 꼽았고, 39.3%는 지원금이 수요에 비해 적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56.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료 지원(51.2%), 직간접세제 혜택·감면(4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회복 시기를 놓고는 응답자의 45.3%가 1~2년 정도를 꼽았으며, 2년 이상 장기화를 전망한 응답자들도 39.2%를 기록했다.

서선욱기자

외식 할인쿠폰 내일 재개...배달앱에서만 된다

배민 등 총 11개 앱 참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외식 할인쿠폰'이 29일부터 배달어플리케이션(앱)에 한해 다시 풀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한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중단 전까지 이용 실적은 그대로 누적돼 반영된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소비 진작책으로 탄생한 이 외식쿠폰 사업은 8월14일부터 시작됐지만 이틀

뒤 확진자 급증으로 중단됐다. 이어 10월30일 재개됐다가 11월 중순 이후 다시 유행이 시작되면서 재차 중단된 바 있다.

내년 1월3일까지 전국적인 '연말연시 방역관리 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배달앱을 통해서라도 쿠폰을 뿌려 외식 소비 위축을 막겠다는 게 이번 재개 취지다.

참여 배달앱은 공공 6개, 민간 5개 등 총 11개다. 29일부터 바로 이용 가능한 곳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 ▲먹게비 ▲배달특급 등 7개사다. 나머지 ▲핑퐁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사는 카드사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참여할 계획이다.

할인 요건은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총 4회 결제'다. 그러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해주거나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인정된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오픈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결제는 반드시 배달앱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장결제나 배달원 대면결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해오는 것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청년농업인, 3년간 월 100만원 정착지원금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1800명 선발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내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1800명 선발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세~만 39세 청년으로,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여성 청년 농업인, 다문화 구성원, 자녀 동반 신청자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바우처로 지급돼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창업자금 융자(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농의근로 병행은 1년에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영농 초기에는 농

업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것이다. 대신 이 경우 소재 시·군·구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은 28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농림사업청 보시시스템에 접속해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2월 서류평가, 3월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에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LG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해외서도 인기몰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대폭 증가



러시아 모스크바의 전시장에서 LG전자 직원이 스타일러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의 의류관리기 스타일러가 차별화 된 트루스팀의 우수성으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7일 LG전자에 따르면 LG스타일러의 해외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대폭 증가했다.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지난해 판매량의 두 배를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LG스타일러는 특허를 받은 트루스팀 기술을 갖춘 스팀 가전이다. 물을 100도로 끓여 만든 트루스팀 스팀은 스타일러 뿐 아니라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생활가

전에 적용돼 살균·세척·탈취·주름완화 등의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LG스타일러는 트루스팀으로 옷의 유해세균을 99.99% 살균하고 옷에 밴 냄새와 집먼지 진드기 등을 없애준다.

한국의과학연구원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스타일러의 위생살균 표준코스도 황색포도상구균·녹농균·폐렴간균을 99.99% 제거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시험에서도 스타일러의 위생살균 바이러스 코스로 인플루엔자·아데노·헤르페스·코로나(PEDV) 등 바이

러스를 99.99% 없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독자 기술인 무빙행어를 통해 옷을 1분에 최대 200회 털어 바람만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미세먼지와 생활주름도 제거할 수 있다.

바지 관리기는 바지를 누르는 방식으로 바지선을 잡는다.

LG전자는 지난 2011년 국내에 스타일러를 선보인 이후 미국,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에도 스타일러를 출시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매년 초 개최하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개막을 앞두고 가장 혁신적인 제품에 수여하는 CES 혁신상을 3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LG전자는 다양한 신제품으로 스타일러 시장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최근 공간 인테리어 가전 오브제 컬렉션 스타일러, 기존 모델 대비 한층 강화된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스타일러 블랙에디션2를 잇따라 국내 출시했다.

LG전자 H&A사업본부 과도영 H&A해외영업그룹장은 "차별화된 트루스팀과 무빙행어 등을 앞세워 해외 고객들도 LG스타일러의 신개념 의류관리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나기자